

“백신, 특별히 늦지 않게 집중”

문 대통령, 5부 요인 초청 간담회서

“백신 개발국에서 먼저 접종되는 것은 불가피한 일

경기 회복돼도 소상공인·자영업자 후유증 오래갈 듯”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확보 문제와 관련해 “요즘 백신 때문에 또 걱정들이 많은데 아마 백신에 있어서도 그동안 백신을 생산하는 나라에서 많은 재정 지원과 행정 지원을 해서 이제 백신을 개발했기 때문에 그쪽 나라에서 먼저 접종되는 것은 어쩌 보면 불가피한 일”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5부 요인 초청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한 뒤 “그 밖의 나라들에서는 우리도 특별히 늦지 않게 국민들께 접종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고, 준비를 잘 하고 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그간 백신 확보 방안에 대해 일일 보고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야권을 중심으로 ‘백신 확보 책임론’이 제기되면서 국민 불안이 가중되자 직접 언급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5부 요인 초청 간담회 주제는 2018년 8월10일 이후 2년 4개월 여만이다. 박병석 국회의장과 지난 달 새로 취임한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장에 대한 축하 인사 의미를 담아 열리게 됐다.

문 대통령은 “요즘 여러모로 어려운 시기다. 한해 내내 어려웠는데 한해의 마지막도 어려운 시기를 계속 겪고 있다”며 “뛰니 뛰니 해도 코로나 상황이

어렵고 그 때문에 경제가 어렵고 그로 인해 소상공인, 자영업자, 청년, 서민들의 민생도 아주 어렵다”고 우려했다.

이어 “다행스럽게도 우리가 방역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아주 모범국가로 불릴 정도로 잘 대응을 해왔다”며 “앞으로도 우리 국민들의 높은 시민의식과 또 공동체 의식으로 코로나를 잘 극복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또 “경제 부분에서도 다행스럽게 올해 코로나 때문에 마이너스 성장이 불가피하나, 마이너스 성장 폭이 가장 적어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7개국 중 올해 성장을 1위를 기록했다. 내년도까지 합치면 코로나 위기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 아주 드문 나라 중 하나인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더 빨리, 더 강하게 경제 회복을 일으켜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며 “특히 그 가운데서 안타까운 것은 거시 경제 그리고 경기 면에서 점차 회복해간다 하더라도 이

반에 어려움 겪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후유증은 아주 오래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이어 “고용은 경기가 회복되고 난 이후에도 아주 서서히 뒤편에서 회복이 되는 법이기 때문에 일자리의 어려움도 오랫동안 지속되리라고 생각된다”며 “그것이 가장 마음이 무거운 일인데 취약계층들의 어려운 삶 그리고 또 고용, 이것을 회복시켜 나가는 데에도 총력을 다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의 어려움을 우리가 이겨나가는 데 헌법기관장들께서도 함께 마음을 해 주시고 또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라겠다”고 당부했다.

간담회에는 정 총리와 박 의장을 비롯해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김명수 대법원장, 노정희 선거관리위원장 등 5부 요인이 모두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서훈 국가안보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최재성 정무수석, 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이 자리했다. /뉴시스

“도시재생 뉴딜 선정 환영”

전주 2곳 등 전북 6곳... 민주 김윤덕 의원

“전주형 도시재생, 국내 대표 사업 될 것”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빈집과 노후 불량건축물 등이 쌓여있는 전주시 인후·반촌과 팔복동 지역의 정주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예정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은 국토교통부의 ‘2020년 3차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서 전주시가 신청한 인후·반촌 지역과 팔복동 지역 등을 포함해 전북 지역 6곳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전주시가 신청한 인후·반촌 지역과 팔복동 지역은 두 곳 모두 주거형 총괄사업자 부문에 선정됐다. 총괄사업자 부문에서 복수 사업자가 선정된 지역은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전주시가 유일하다.

인후·반촌 지역은 지난 2016년 재개발 정비사업 예정지구에서 해제되면서 상·하수도 등 생활기반 시설 투자가 이뤄지지 않아 인구 감소와 고령화, 빈집 증가, 주택

노후화 등 도심 쇠퇴 문제가 심각한 곳이다.

이 지역에는 내년부터 2024년까지 총 사업비 350.5억원을 투입해 공공임대주택 63호, 플랫폼 등 거점시설이 조성될 예정이다.

팔복지역은 산업단지가 쇠퇴하면서 인구가 급격하게 유출돼 빈집이 증가하고, 고령인구 비율이 30%로 정주여건이 매우 열악하다. 또한, 협소한 도로와 막다른 골목길로 주민간 커뮤니티가 단절돼 있고, 안전도 위험한 곳이다.

이 지역에는 내년부터 2024년까지 총 사업비 550.75억원을 투입해 공공임대주택 50호 공급, 그린리모델링을 통한 집수리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김윤덕 의원은 “도시재생은 단순히 마을을 정비하는 사업이 아니라, 주변지역까지 파급력을 줄 수 있는 지역의 랜드마크로서의 성과물로 만들어야 한다”면서 “두 사업이 전주시를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도시재생사업이 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LH, 그리고 전주시와 함께 잘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코로나19 대응부서 격려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이명연)는 22일 코로나 19의 지역 확산 차단을 위해 24시간 비상체제 유지와 함께 신속한 검체 채취를 도모하는 전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임실군 보건의료원 및 전주시 보건소를 방문했다.

이날 환경복지위원들은 의심환자 발생 시 진행되는 코로나19 검체 처리 전과정에 대한 설명과 함께, 애로사항 청취 후 간식 및 유자차를 전달하고 관계공무원들을 격려했다.

이명연 환경복지위원장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도민 모두가 어려운 상황 속에 최일선에서 고군분투 하는 현장 요원들이 영웅”이라고 말하며 “감염 예방을 위해 막중한 책임감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유호상 기자



‘화재감시, 이젠 드론을 활용하자’... 전북도, 한글과컴퓨터그룹과 맞손 전북도는 22일 전주 한옥마을에 위치한 교통119안전센터에서 ‘드론 활용 화재감시 시스템’ 구축을 위해 한글과컴퓨터그룹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사진=전북소방본부 제공)

“다주택 임대사업자에게 깎아준 건보료 월 5600만원”

이용호 의원 “장려정책 폐지 속 혜택 유지 바람직하지 않아”

‘건보료 폭탄’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지난달부터 새로 부과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주택 임대사업자 5천여명은 건보료를 감면받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임대사업 장려정책으로 최대 80%까지 감면 혜택을 받는 것인데, 과도한 혜택을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9년 임대소득분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감면받은 지역 가입자는 총 5,288명으로 집계됐다.

건강 금액은 총 5,631만원이며, 평균 건강보험료는 58.4%로 나타났다.

건보료 감면 대상은 임대수입 연 2천만원 이하인 다주택 주택임대사업자로, 지난 2017년 12.13 임대사업 활성화 대책을 통해 4년 임대 등록 시 임대 기간인 4년 동안 건보료 40%, 8년 임대 시 8년 동안 80% 감면 혜택이 주어졌다.

이후, 정부가 임대사업 장려정책의 실패를 사실상 인정하고 지난 7.10 대책에서 일부 임대사업 제도를 폐지했으나, 기존 임대사업자에게 주기로 했던 혜택은 유지됐다.

지역분별로 보면 감면 인원이 가장 많은 곳은 서울강원본부로 총 2,457명, 평균 건강보험료는 58.9%였다.

그 다음은 인천경기본부로 총 1,653명, 평균 건강보험료는 57.9%였다.



연령별로는 50세 초과~70세 이하가 3,312명으로 가장 많았고, 70세를 초과한 사람이 1,035명으로 뒤를 이었다. 다음으로는 30세 초과~50세 이하 914명, 30세 이하 27명 순이었다.

보건복지부 ‘보험료 감감고시’에 따르면, 건보료 감면은 50% 이상 할 수 없게 돼 있다. ‘건강보험료 감감 대상 고시’를 봐도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취약계층, 5인 이상 사업장의 일차

리안정자금 지원대상, 세월호 피해 주민도 건강보험이 50%를 넘지 않고, 건강기간도 짧게는 3개월, 길게는 1년 수준이다.

경제적 취약계층, 재난 피해주민이 감면받는 것이 이 정도 수준인데, 건강보험료 보나 감면 기간으로 보나 유독 다주택자인 임대사업자에게만 파격적인 혜택을 주고 있는 것이다.

이용호 의원은 “이처럼 전례 없는 혜택은 공정성을 해치는 것이고, ‘소득 중상 부과’ 원칙에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임대사업자에 대한 건보료 감면 혜택은 처음부터 부처 간 이견이 심했고, 복지부는 부정적이었다”며 “정부가 이미 임대사업자 장려정책을 폐기한 상황에서 과도한 건보료 혜택을 유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조속히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호상 기자

김제 신풍동 일원, 도시재생 뉴딜로 ‘새 활력’

내년부터 5년동안 628억원 투입 이음길 조성 등 추진

민주 이원택 의원, 국토부 등에 설득 최종 선정 이끌어내

김제시 신풍동 일원이 ‘2020년 제3차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 김제역 인근 지역의 상권 활성화 등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제시 신풍동 일원은 과거 김제역을 중심으로 김제의 대표적인 중심가였지만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돼 지역 상권의 붕괴와 빈집포의 증가로 도시재생이 시급한 상태였다.

그러나, 이번 신풍지구 도시재생뉴딜사업 선정으로 내년(2021~2025년) 총사업비 628억원(국비 150억원)이 투입, ▲신바람 창업지원, 어울림센터 건립 ▲신바람 ‘신풍이음길’ 조성사업 ▲마을정원화 사업 ▲상생협력소가 조성 ▲LH행복주택 조성 등 다양한 형태의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 주도의 성장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신풍동과 황산면 일대에 2023년까지 추진 중인 ‘김제역 풍수해 위험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총사업비 395억원)과 함께 사업이 진행돼 신풍동 일대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 큰 시너지 효과가 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제3차 도시재생뉴딜사업지로 신풍지구가 최종 선정되기까지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국회의원의 역할이 컸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원택 의원은 김제시와 지역주민들의 철저한 준비와 노력들이 값진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신풍지구 도시재생사업의 필요성 등을 국토부, LH 등 관계부처에 끈질기게 설득하고 이 해시켜왔다.

이 의원은 “과거 신풍동은 김제시 행정의 중심이었고, 지역의 관문인 김제역이 위치해 있는 김제시의 상징과 같은 곳이었다”며 “이번 도시재생뉴딜사업을 통해 쇠퇴한 지역 상권이 활성화되고,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기반한 주민주도형 사업 추진으로 지역공동체도 더욱 활성화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지난 2018년과 2019년 도시재생사업지로 선정된 요촌동과 신풍지구도 사업이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 강조했다. /유호상 기자

마스크 착용 ‘필수’·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



민간조사 전문기업

탐정 法人 해결사

가족 실종자찾기
민.형사 증거조사
개인.가족.기업 고민상담

010-5636-7755

907호